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2. 5.(목) 09:00** (2025. 2. 5.(목) 석간)

민생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고용 위기지역 선제 대응 강화한다.

- 고용노동부, 설 명절 앞두고 민생 점검을 위한 확대간부회의 개최
- 임금체불·산재예방 및 지역 고용 상황 등 민생 현안 점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설 명절을 앞둔 2월 5일(목),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체 간부 및 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이 참석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설 명절을 맞아 국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일자리, 임금체불 및 산재예방 등 현안을 집중 점검**하고,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민생 안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이 중심이 되어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또한, 사업장이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에 대한 **자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집중 지도**한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험 상황 신고에도 적극 대응**한다.

김영훈 장관은 체불 노동자 보호를 위한 **도산 대지급금 지급 범위 확대**(임금채권보장법),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줄이는 **단기 육아휴직제 도입**(남녀고용평등법),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산업안전보건법) 등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된 임금체불과 산재예방 등 관련 민생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방관서들이 **국민께 상세히 안내할 것과 신속한 집행 준비를 당부**했다.

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주요 민생법안이 아직 남아 있다.**”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는 **남은 민생법안이 입법 완료**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역별 고용 위기 상황을 점검하고 최근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주력산업의 구조적인 저성장 속에서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2월 27일 고용위기 선제대응 지역 지정이 종료되는 **전남 여수시와 광주 광산구**에 대해서는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악화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을 최우선으로 검토**한다.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을 1분기 내에 신속히 집행**하여 위기 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정착 지원** 등을 제공한다.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인 일자리 정책을 벗어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지역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제도적 토대를 만드는 **「지역고용활성화법」(가칭)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지역 일자리는 곧 민생**과 직결된 문제”라며, **위기가 발생한 뒤 대응하면 늦다.**”라고 강조하고,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이·전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붙임1 설 명절 대비 확대 간부 회의 개요
붙임2 모두 말씀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최영범 (044-202-7026)
		담당자	사무관	김진영 (044-202-7028)
			사무관	차정환 (044-202-7032)
	노동시장정책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지영철 (044-202-7404)
		담당자	사무관	최서현 (044-202-74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1 **설 명절 대비 확대 간부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5(목) 09:00~10:00, 세종청사 및 서울청 소회의실영상

□ **(참석)** 본부장관(주재), 차관·본부장, 全 실·국장,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지방7개 지방청장

□ **(안건)** 지역고용위기 대응 및 지원방안*

* 지역 고용동향,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원강화 등

□ **(세부진행 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09:00~09:01 (″1)	▸ 개회 및 국민의례	▸ (사회) 기획재정담당관
09:00~09:03 (″2)	▸ **모두말씀(장관)** * 모두말씀까지 공개	
09:03~09:28 (″25)	▸ **지역고용위기 대응 및 지원방안 등 안건 설명**	▸ (발제) 노동시장정책관 등
09:28~09:58 (″30)	▸ 지역고용 현안 등 자유토론	
09:58~10:00 (″2)	▸ 마무리말씀(장관)	

붙임2 **모두 말씀**

안녕하십니까, 장관입니다.

오늘 확대간부회의는 민족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민생 현안을 점검하기 위해 본부 실국장과
전국 48개 지방관서를 대표해 7개 지방고용노동청장이
함께 모였습니다.

정부가 바뀌고 처음 맞는 설입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해야 합니다.
국민이 '내 삶이 바뀌었다'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에 있는 감독관 여러분들의 노고로
지난해 임금체불 노동자 수가 3년 만에 감소하고
청산율도 역대 최고인 90.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체불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의 범위를
6개월로 확대하는 임금채권보장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체불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하고,
보호도 두텁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질병, 방학 등 단기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제도 도입되었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해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토록 산업안전보건법도 개정되었습니다.
산재 피해 노동자와 유가족들이
왜 산재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습니다.

오늘 기후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합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법정형 상향과 임금구분지급제 도입,
산재 다수·반복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지난해 9월 발표한 임금체불 대책과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담긴 법 개정안들이
국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요 민생법안이
신속히 의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만으로는 국민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지난해 현장에서 지방관서 감독관들의 노력으로
체불 노동자 수를 줄인 것처럼
변화한 제도의 효과가 숫자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현장에 맞닿은 지방관서에서는
개정된 법과 제도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하고 신속히 집행해 주십시오.

특히, 설 명절에 대비하여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 지방관서장이 중심이 되어
집중 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 한 분이라도 억울함 없이 따뜻한 설을 맞도록
고용노동부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설 연휴 전후는 작업 물량 증가와
작업 중단 후 재개 과정에서 사고 위험이 높아집니다.
명절 분위기로 노사 모두 안전에 대한 경각심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휴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소홀함 없이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업장이 자체 안전 점검과
한랭질환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역 현장에 밀착하여
국민들에게 일할 기회가 제대로 보장되는지,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억울함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야 합니다.

최근, 산업구조 전환과 세계적인 공급 과잉으로
석유화학, 철강 등 지역 일자리를 책임지던 주력산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제조업에서만
7만 3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최대 폭의 감소입니다.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전반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부는 지역 고용 상황을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오는 2월 27일 전남 여수와 광주 광산구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기간이 종료됩니다.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지정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장에 맞는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450억원의 예산으로
'위기업종 노동자 생활지원'과 '이·전직 노동자 정착지원'
등을 1분기 이내에 신속히 집행하여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여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도 만들겠습니다.

고용 위기가 발생한 후 대응하면 늦습니다.
전국 지방관서는 늘 지역 고용 동향을 살피고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상시 준비 태세를 갖춰 주십시오.

본부는 오늘 논의되는 내용이 회의로만 끝나지 않고,
즉시 현장 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관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주십시오.
저도 직접 지역 일자리 상황을 챙기고,
현장을 찾아가 노·사 등 의견을 듣겠습니다.
민생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도 찾아가 설명하겠습니다.

설 명절을 맞는 모든 일하는 국민이
고용노동부가 있음을 느끼고,
정권이 바뀌니 내 삶이 바뀌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우리 노동부’가 되어 성과를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